

“전쟁 유산서 벗어나야 동북아 평화 시작”

· 한국전쟁 국제학술회의

한국전쟁 영향

남북대결에만 머물지 않고 동북아·세계 질서 뒤흔들어, 60년간 안정·불안정 오가

한국전쟁은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대결에만 머문 전쟁이 아니다. 동북아 및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건이다. 한국전쟁이 형성한 동북아 질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평화 구도의 출발점이었고, 이후 60년간 한반도와 동북아는 안정과 불안정을 오갔다. 천안함 사건은 이 같은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동아시아협력센터가 주최해 23일 연세·삼성학술정보관에서 열린 한국전쟁 국제학술회의에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세번째) 등 발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동아시아협력센터가 23일 연세·삼성학술정보관에서 개최한 한국전쟁 60주년 특별국제학술회의 ‘한국전쟁과 동북아 평화-과거, 현재, 미래’는 한국전쟁의 기원이나 책임보다는 전쟁의 영향과 유산을 성찰하고 그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쟁 담론’에서 ‘평화 담론’으로 가기 위한 시도였다. 회의에서 한·미·일·중을 대표하는 한국전쟁 전문가들은 한국전쟁에서의 한·미·일·중의 역할과 전쟁이 각 국가와 동북아에 미친 영향을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전쟁이 갖는 지역적·세계적 본질을 규명하고 동북아 평화와 화해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전쟁의 성격과 영향 = 첫 발표자로 나선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한국전쟁의 성격을 “단일정부를 세우기 위해 남한과 북한 두 국가 사이에 벌어진 독특한 형태의 내전이지만, 모든 동북아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했고 이들 국가의 운명이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동북아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와다 교수는 “일본은 해상보안군, 국영철도, 선박, 적십자 간호사들까지 연합군 최고사령관에 의해 동원되고 선원들이 인천상륙작전에 합류하는 등 미국의 군사기지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고 국민들도 자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극복 어떻게

무력통일 실패 경험 되새겨 북한과의 화해 노력 필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해야

선즈화 중국 화동사범대 교수는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 측 자료와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전쟁은 중국이 국제문제와 중국 주변지역에서의 위기에 처음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며 “마오쩌둥은 중·소동맹을 지키고 아시아의 선두국가로서 국제적 혁명을 이끌기 위해 미국과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즈화 교수는 특히 “중국은 51년 유엔의 휴전 제의에 대해 미국의 음모이고 한반도에서 미군을 완전히 몰아낼 실력이 있다고 오판해 거절했다”며 “당시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한국전쟁은 1년 안에 끝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중국의 오판 배경에는 소련과 스탈린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었다”며 “스탈린은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투로 다른 지역에 신경을 못쓰게 되고, 중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 또한 문제였기 때문에 휴전은 늦출수록 좋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전쟁이 미국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라로 바꾸어놓았다”며 수백개의 해외 주둔 미군 기지 설치와 군산복합체의 부상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근대사에서 처음으로 주도국이 동맹국이면서 경제적 경쟁자들의 국가에 광범위하게 연결된 군사기지 네트워크를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한·미동맹은 남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양자 안보동맹과, 중국·소련을 저지하고 일본을 견제하는 지역동맹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전쟁을 계기로 동북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각국을 개별 바퀴살로 하는 양자관계가 형성돼 유럽이나 동남아 같은 지역다자기구를 갖지 못하는 세계 유일의 지역이 됐다”고 진단했다.

한국전쟁의 극복과 동북아 평화 구축 = 참석자들은 동북아 평화가 한국전쟁의 유산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된다고 입을 모았다.

와다 교수는 “전쟁의 유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남북한 화해로, 남북한은 무력에 의한 통일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일본은 동북아 6자 안보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임진왜란, 중·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 등 동아시아에서 발발한 4번의 전쟁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한국은 북·일관계 개선에, 일본은 휴전체제 완화에 무관심한 것 같다”며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주일미군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건과 일본의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 상상력인가”라고 되물었다.

천안함 사건을 사례로 평화체제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한반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남북한 간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박명림 교수도 “보수주의자들조차 적대하는 상대를 증오할수록 그들과 대화했다”며 “정전협정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 합법정부가 어떻게 괴뢰와 대화하느냐’며 참가하지 않는 바람에 이후 한반도 논의에서 배제됐다. 이번이 또 그런 사례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태균 서울대 교수는 “정전협정이 대부분 무효화돼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 대화할 채널이 없어 문제다. 이를 고려한 평화체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천안함 사건이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시발점을 마련해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커밍스 교수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숙고하고 북한과 화해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한반도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더 많은 천안함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명림 교수는 “한국문제의 폭발이야말로 동북아에서 지역전쟁, 세계전쟁을 의미하고 동북아의 안정 없이 한반도의 안정도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영구평화를 위한 이중과제가 놓여있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구축,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공동체 건설의 이중트랙이야말로 영구평화에 이르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입력 : 2010-06-23 18:18:37 | 수정 : 2010-06-23 18:18:37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